

열리고, 투명하고, 함께하는 대학사회를 위하여

강 정 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엄청난 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민족해방과 사회개혁을 위해 뚜렷한 역사의 주체로서 우뚝 서왔던 빛나는 전통을 세웠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3·1 독립운동 전야의 2·8 동경유학생 민족선언, 광주학생 의거, 4·19 혁명, 6·3 항쟁, 민청학련, 광주항쟁, 6월민주항쟁 등 이들 모두는 우리 민족사에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내면서 쟁취한 고귀한 역사의 산물이다. 이

들 역사계기들이 한결같이 우리 학생들의 주도나 주체였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 학생에 대한 위상설정이 전적으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임을 확인시켜 준다.

왜 학생이 사회변혁과 개혁의 주체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인과관계 규명은 이 글에서 논의하지 않겠다. 그 대신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87년 6월항쟁 이후 대학내부의 개혁과 달라진 점을 짚어 나가면서 이들 변화의 추동력

이 과연 누구였던가를 밝힘으로써, 곧 귀납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학개혁에서 학생참여는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펼쳐 나가겠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제공한 항목을 위주로 하겠다. 그것은 강의평가제, 교과과정 개편, 교수채용에서 학생의견 반영과 공개강의, 예·결산공개 및 참여, 대학총장 선출에서 학생참여 등이 다.

우선 강의평가제를 살펴보자. 강의평가제는 외국의 경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 불만부분, 이해정도, 시험의 타당성, 성적분포에 대한 학생의 반응, 교수방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또한 교수에게 책임의식을 불어 넣어 강의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이 자료는 교수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고려대학이나 이화여대를 비롯해 몇몇 대학은 이미 전면적 실시방침을 확정시켰고 머지않아 대부분의 대학이 뒤따를 것이다.

이 강의평가제는 학생들이 6월민주항쟁 이후 교과과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단지 자원하는 교수에 한정하여 교과위원회 주관으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글쓴이도 이를 통해 강의의 목소리가 작고, 고저 및 억양을 잘 구사하지 못하여 강의가 단조로운 형식을 띠는 값진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조치를 학생들이 벌써 6월민주항쟁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은 그들의 선도성이 학원개혁에 청량제와 자극제가 되기에 충

분하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외부강사 초빙의 근거 자료로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던 점은 아주 높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일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수들에게 충분한 자극이 되었다.

다음은 교수채용에 대한 학생참여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우선 감성이 앞서는 판단은 어떻게 학생이 감히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수의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설부른 속단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학생도 교수나 교직원 및 재단 못지않게 중요한 대학의 공동주체이다. 더 나아가 교수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만으로도 교수채용에 학생참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생참여는 교수와 동일한 지분의 의사결정권과 같은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참여가 실제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교수채용에 대한 학생참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강의평가제처럼 당연한 것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

다.

그럼 구체적으로 학생참여가 교수채용에 가져왔던 또는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우선 채용교수의 세부 전공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어 중복전공이나 케케묵은 박물관 전공, 불요불급 전공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물론 교수들의 합리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학과는 학생참여 없이도 잘 운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서 고질적인 학연, 지연, 인연 등의 고리를 끊는데 많은 공헌이 있었고 또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학과운영의 경우도 학생의 참여가 있을 경우 좀더 면밀한 검토가 기대된다.

둘째, 공개강좌의 제도화이다. 학생참여의 경우 공개강좌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개강좌를 통하여 학문의 깊이, 강의 능력, 전공의 섭렵정도, 시각과 인품, 관심영역, 연구계획 등을 가늠하고 검증하자는 것이다. 공개강좌라는 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검증을 거쳤을 경우 터무니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야합은 자리잡기 힘들다. 교

수들, 학교당국 또는 재단만으로 이루어진 폐쇄된 공간에서의 검증은 불합리성과 야합 등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개방이나 견제가 없고 힘의 분산이 없을 경우 항시 권위주의, 은폐, 왜곡 등이 자리잡는 경향이 농후하다. 검증의 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더욱더 합리성과 객관성이 보장된다. 공개강좌의 실시와 학생참여도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과정의 공개화이다. 학생참여의 경우 지원자의 서류, 심사과정, 채점표 등 모든 관련사항의 공개가 요구된다. 이 경우 위의 정보공개원칙이 말하듯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공개되었을 때 교수채용시 금품수수나 학연시비가 따르는 부조리는 엄청 줄어들 것이다. 혹자는 공개만 하면 되지 학생참여는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생만큼 뚜렷한 주인의 식으로 공개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주체는 없다. 인사비리가 많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의과대학의 수련생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공개원칙에 의해 학생참여가 이뤄진다면 고질적인 의과대학의 인사비리는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다.

외국 대학의 경우 교수채용은 물론 학생선발에까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다. 왜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긍정적인 학생참여가 일부 교수들의 주장처럼 교권침해라고 백안시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스승의 그림자도 밝아서는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환상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교수의 편협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질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교수채용에서 학생참여는 전공선정의 엄밀성 보장, 공개강좌를 통한 검증과정의 정착화, 모든 채용과정의 공개 및 검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미 이들 긍정적인 결과 때문에 교수채용에서의 학생참여는 어느 정도 자리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학생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

부 교수들 가운데 교수채용에서 금품수수, 학연 및 권력유착의 비합리적인 행위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수참여 자체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포용하고 이해시키면서 또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스승으로서의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학생들의 간헐적인 무리한 요구도 합당한 요구로 전화되기 마련이다.

다음은 교과과정의 개편에 관해 살펴보겠다. 아마 남한의 대학사상 교과과정이 학교 자체의 재량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장 많이 바뀌게 된 시점이 6월항쟁 이후인 88~91년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학교마다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기존의 교과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학생의 선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개편되었다. 이를 계기로 새로 개설된 몇 가지 보기를 든다면 한국현대사, 사회과학방법론, 한국사회의 이해, 여성학, 북한사회론, 정치경제학, 환경학, 민족통일론 등으로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편이 있었다.

왜 이들 신설 과목이 획기적이었고 개혁적이었나를 ‘한국현대사’에 국한하여 논해보자. 대학내 한국현대사(현대사의 기점을 8·15해방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강좌는 6월항쟁 이전의 경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형식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현대사 강좌도 내용적으로는 현대사가 아니라 근대사에 속한다. 그렇게 많은 국사학과 교수님들 가운데 현대사를 전공한 사람 또한 거의 전무하였다. 겨우 80년대 들어와서 젊은 비제도권 학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국사학계보다는 다른 사회과학계에서 먼저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되었다. 역사서술에서 현대사의 비중이 50퍼센트를 넘는 게 세계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식을 외면한 국사교육이 판을 쳐왔던 곳이 우리의 국사교육이었다.

1996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승만이 친일파·반역자 숙청을 거부하고 ‘반민족행위자특별처벌법’을 무력으로 강제해산한 것을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우리 현대사를 올바르게 기술하는데 무려 50년 가까이 걸렸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기술지침이란 게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잔재 청산을 반대한 것이 전국의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하는 것으로, 어느 용기있는 교수님의 지적처럼, 또 한번의 왜곡을 강요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35년간 잔악무도하게 식민통치한 일본제국주의자, 그들의 앞잡이로서 반민족행위를 자행한 친일파를 육성보호한 정권에게 어떻게 정통성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학자들에 요구하지 말고 신통술을 부리는 마법사에게 우리나라 현대사 저술을 온통 맡겨버리는 게 나을 터이다. 객관적 사실과 학문적 패러다임에 의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지식인이 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친일파를 애국자로, 또 친일파를 반민족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는 마법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권력의 요구를 거절한 많은 대학인이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수난을 당하여 왔던 것이 이승만 정권 이후 군부독재하의 실상이었다. 문민시대를 맞았다는 김영삼 정권 아래에서도 경상대 교수들의 학문적 업적이

학술토론의 장에서 평가되기 보다는 신공안정국의 공안장대로 난도질 당하는 위기를 겪었다.

바로 이러한 남한의 굴절되고 왜곡된 태생적 한계가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변질시키고, 또 현대사를 금기시하여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금기사항을 그 유명하다는 국사학의 대가님들이나 지성의 상징이었던 총장님들이나 선비들 모임인 국사학회가 주도하여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참여가 무너뜨린 것이다. 곧 교과과정의 개혁을 학생들이 이룩한 것이다.

개편내용의 좋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적인 양적 개편과 질적 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학교자체의 자발적 수준에서 추진되는 합리적 개편은 학문외부의 부당한 압력,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와 방관주의, 강좌담당자의 이해관계, 관련학과의 기득권 침해여부, 과별 역학관계, 만성적인 타성에 젖은 관성주의, 진보적인 외부강사에 대한 견제와 담쌓기 등의 저항에 부딪쳐 종종 중도하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무

관한 학생들이 대학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높이기 되는 시점인 6월항쟁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두터운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더 시대에 맞는 교과과정이 그런 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학생참여 없이 과연 이러한 개편이 있을 수 있었을까? 김영삼 정권이 출발하고 사회각층에 개혁열풍이 휘몰아쳤다. 그런데도 오로지 언론과 대학이 두 곳만은 개혁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과연 학생참여나 외부의 압력이 없이 대학 내부에서 개혁이나 정화를 이끌어갈 자정력을 제대로 갖추었을까? 개혁무풍지대였던 우리 교수들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제 총장선출에 대한 학생참여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다. 요즘 대학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일부 현역 총장들이 직선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간선제나 임명제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었다. 이에 개혁면죄부를 받고 무소불위의 자만에 마비된 제도권언론들이 가세하여 직선제 폐지가 마치 전복 무주 총장모임의 전체 결의사항인 것처럼 왜곡하는 통에 직

선제 폐지는 기세를 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문제는 조문과동이나 시대역행적인 매카시즘의 히스테리 병과 함께 발전하여 신공안정국에 끼워넣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답게 검증이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더구나 대학총장들이야 이 점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제대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이후 도달한 결론인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정된 정치개혁법이 잘 말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개 교수가 반론한 것처럼, 이들 부분적인 문제점 때문에 민주주의의 대진제인 대통령·국회의원 선출에서 보통선거를 폐지하자는 논리와 똑같은 왜곡논리를 대학총장이 앞장서서 주장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국 150여 개의 대학 가운데 직선제 총장을 선출한 곳이 겨우 40여 개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이 직선제 대학과 나머지 비직선제 대학 사

이에 대학운영 면에서 학문의 기여도, 민주성, 공개성, 효율성, 합리성, 부정·정실·이권개입·장기집권·권위주의의 부재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 차이가 직선제에서 비롯된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간의 파벌, 보직안배, 일관성 없는 학교정책 등이 직선제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 차이가 직선제 때문이라는 인과고리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했을 경우에만 직선제 폐지와 같은 엄청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소수의 대학총장들이 이와 같은 엄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정적인 차원의 논의를 거쳐 불쑥 내뱉은 직선제 폐지주장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마치 '뉘 뻔한 이야기인데 무슨 검증이 필요해?'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교수들의 참여까지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로 예민한 총장선출문제에 학생까지 참여시키자는 논

의는 얼핏 보기에 어불성설인 듯하다. 그러나 대학공동체의 수장을 선출하는 데 대학의 중요주체인 학생참여는 어떤 형식이든 이뤄져야만 그들이 주인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참여라는 의미는 교수들과 같이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참여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공청회, 자격심사위원회, 의견전달, 선출절차의 논의 과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공청회에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실현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상대방을 인신공격한다든가 하는 품위없는 행위를 절제하게 될 것이다. 교수들도 직선제의 폐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파벌이나 보직안배 등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또 하나의 참여집단인 학생이 있을 경우 스스로 정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개를 공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등등 긍정적인 측면은 아주 많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이 교수들의 인격과 품성을 모독한다고 공박할지 모른다. 그

러나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라도 조직의 일원이면 그 조직이 행사하는 외적 강제력 때문에 개인적 품성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이밖에도 학교 예산·결산, 장기발전 계획 등 여러 분야의 학생참여는 단원사회의 모습을 열린사회로 이끄는 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해왔고 또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의 결과로 학교 예산·결산이 많은 부분 공개되고, 재단의 부당한 간섭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재단전입금의 확충을 요구하는 용감하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대학교정에서 공공연히 나오게 될 수 있었던 점 등은 분명히 대학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들 몇몇 대표적인 사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대학개혁에서의 학생참여는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지 억제되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는 열린사회의 건강한 징표이고 풀뿌리민주화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진작되는 것은 사회의 건강과 자기정화력을 키워 주는 기반

이 되어 그 사회가 도태되지 않고 자기 재생산을 하도록 만든다.

대학개혁에서의 학생참여가 불려일으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학생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매한 발상이다. 장은 담그면서 구더기를 방제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여유있고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대학총장직선제에서 구더기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민주적인 직선제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방제가 가능하듯 학생참여의 일부 부정적 현상들도 혼련과 지도와 협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이다.

21세기는 정보화, 개방화, 민주화의 시대이다. 우리 대학사회가 군부독재 시절부터 겪어왔던 관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정보를 대학의 공동주체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일부 학교당국이나 재단 또는 정부가 독점하게 되어 정보의 유통이 차단되고, 의사결정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민주화되

지 않고 폐쇄회로화되고 비민주화를 답습할 때 대학은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며 경상대학의 경우처럼 공권력과 외부로부터 대학자율의 침해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낙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정부주도의 대학개혁이 위로부터 강요되고, 학문적 결과물을 국가보안법이란 시대망령적인 악법으로 올라가미를 매려 했던 점이 이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

다. 외부로부터 또는 위로부터의 타율적인 대학개혁이 강요되어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기 이전에 대학사회는 거듭나야 한다.

이제 대학은 대학의 공동주체들이 더불어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 탈바꿈의 차원에서 학생집단은 공동주체로서,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견지하는 대학의 동반자로서 정당히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또 그 주

어진 구실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강정구/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저서로 『좌절된 사회혁명』, 『북한의 사회』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미국과 한국전쟁”, “친일파 청산의 좌절, 그 역사적 교훈” 외 다수를 발표했다.